

증산 · 수출 · 건설

총무처

국무총리지시 제7호

1970. 4. 20.

(조관 151~)

(72~9822)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71년도 공무원 정원 증원에 대한 지시

1. 1970년도에는 정부조직의 경미식
체제로의 개편과 증상의 권한을 하부로 이양
하고 증상의 인력도 상당수를 지방으로 이
체해주는 등 행정조직의 능률화와 기동화에
다른 일련의 정비작업을 하였습니다.

2. 1971년도에도 각 기관의 업무량은 계
속 늘어날 것이며 따라서 인력소요도 증대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증원은 최대한으로 억제
되어야 할 현실입니다.

승공없이 통일없고
방첩없이 평화없다.

국무총리지시 제7호

1970. 4. 20.

3. 따라서 각기관에서는 현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증가되어가는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하고 가급적 신규 증원은 억제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4. 1971년도의 정원책정기준을 별지와 같이 시달하니 증원이 부득이한 기관에서는 국가공무원 정원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편성에 앞서 총무처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 . 무 . 총 . 리

수신처: 가 - (6, 33), 나 (1)

수신처: 2, -(6, 33), 4(1)

FY 71 정원 책정 기본 방침

총 무 처

281

FY 71 정원 책정 기본 방침

1. FY 71 소요 정원은 현년도 수준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FY 71 각 기관의 증원은 다음 각항에 국한하여 최소한의 소요 인력을 심사·책정한다.

가. 제2차 5개년 계획 사업에 직접 관련된 부문에 한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력

나. ^의원무교육에 따른 최학 아동의 자연증가에

따른 표원과 이미 확정된 학급 증설에 따른 표원

다. 사업관서의 시설확충·업무량 증가·세입증수

에 따라 소요되는 최소한의 인력

2. 직제·법령 등의 기재정 또는 개정에 따라

소요되는 최소한의 인력

3. 기타 국가 계획사업 수행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3. 이미 사업이 완료된 부문은 이를 감원 조치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본부인력의 증원과 단순한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증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임시직원은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사업 종류별로 소요인력과 사용기간 등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소한도로 조정한다.

6. 국가공무원정원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부처간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별로 소요안력과 사용기간 등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소한도로 조정한다.

6. 국가공무원정원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부처간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증원은 일체 법제화 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 정원령 (대통령령 제1814호) 발췌

제 6 조 (정원의 요구와 예산조치와의 관계)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년도에 소요
정원을 산정하여 매년 4월 말까지 총무처장
관에게 정원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무처장관은 전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5월 말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제기획원장관은 전항의 통보에 의하여 그
범위 안에서 의년도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 7 조 (임시직원의 인원 책정) 각 중앙행정기

~6~ ㉔

판의 장은 그 소속기관에 임시직원을 필요
로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인원에 대하여
예산 조치에 앞서 총무처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